

전남광주 ‘햇빛소득마을’ 106곳 선정…전국 최다

전남광주 106개 마을이 주민 주도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에 선정됐다. 전국 2차 공모 선정 마을의 4분의 1가량이 전남광주에 모여면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발전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선정 이후에는 부지 확보와 자금 조달, 전력망 연결 등 실제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신청한 전국 608개 마을을 평가한 결과 43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전남광주는 169개 마을이 신청해 106곳이 선정되며 신청 규모와 선정 규모 모두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광주의 선정 마을은 전국 436곳의 24.3%를 차지했다. 전북 59곳, 충북·경북 각 56곳, 충남 47곳, 강원 42곳 등 다른 권역보다 많았다. 다만 신청 마을 대비 선정 비율은 62.7%로, 전국 71.7%보다 낮았다.

이번 공모는 지난 7월 말까지 접수한 마을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구성과 사업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준비 상황을 심사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여건이 갖춰졌는지가 주요 평가 내용이었다.

선정된 마을도 준비 정도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진다. 전국 선정 마을 중 23곳

2차 공모 169곳 신청…전국 선정 마을 4곳 중 1곳 차지 인허가·금융·계통연계 지원…30일까지 3차 공모 접수

은 협동조합과 부지, 자금 계획 등 요건을 충분히 갖춰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나머지 413곳은 일부 요건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선정됐다.

조건부 선정 마을은 대체로 사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지만 부지 임대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자금 계획, 계통연계 상황 등에 보완이 필요한 곳이다. 평가위원회는 이들 마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정은 곧바로 발전시설 착공이나 수익 발생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다.

마을별 준비 상황에 맞춰 부지 사용 조건을 확정하고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한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한다.

행안부는 선정 마을의 사업이 실제 태양광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지방정부와 함께 후속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발전사업 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최대 85%의 금융지원, 사업부지 확보, 계통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원한다.

이번 2차 선정으로 전국 햇빛소득마을은 1차 공모에서 선정한 87곳을 포함해 모두 523곳으로 늘었다. 반면 2차 선정 마을 중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금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현 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된 160곳에는 ‘차기 신청 권고’가 통보됐다. 나머지 12곳은 마을 상황

등으로 신청을 철회하거나 평가에서 제외됐다.

기존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했거나 신청 시기를 놓친 마을에는 추가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행안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차기 신청을 권고받은 마을도 준비 사항을 보완해 다시 참여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관합동현장지원단과 사업 컨설팅을 통해 신청 희망 마을의 공모 준비를 돕는다. 3차 공모 최종 선정 결과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신축 착공 7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천동에서 열린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신축 착공식에 참석한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장애인, 장애인 가족 등이 착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서삼석 “벼랑 끝 농심…7년째 제자리인 농민의 삶”

농업인 의견조사서 10년 후 농업 미래 ‘비관’ 53.2% 6년 전보다 12.2%p 증가…“소득 안전망 확대해야”

농업인 절반 이상이 농업의 미래를 비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소득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이 7일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농업인 의견조사’ 결과 ‘10년 후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53.2%로 2020년 41.0%보다 12.2%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희망적’이라는 응답은 14.2%에 불과했다.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미래 전망 사이의 괴리도 확인됐다. 농업이 “지금

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은 60.7%로 과반을 차지했다.

농촌의 삶에 대한 체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5년 전보다 농촌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17.7%에 그쳤으며, ‘도시보다 농촌의 생활 수준이 낫다’는 답변은 2020년 72.8%에서 올해 76.9%로 높아졌다.

현재 직업에 만족한다는 농업인도 25.2%로 4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했다.

분야별 생활 만족도에서는 보건·의료가 5점 만점에 2.59점으로 6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았다.

농업인들은 무엇보다 소득과 가격 안정



을 요구했다. 정부가 중점을 뒤야 할 정책으로 ‘농민 기본소득 보장’이 52.3%로 가장 높았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사용처 확대 필요성이 3.89점, 대상지역 확대가 3.64점으로 나타났다.

주요 농정 현안에서도 농업인의 소득과 생계에 대한 우려가 확인됐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4%인 반면, 기업에 앞서 농업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63.2%에 달했다.

농협 개혁 과제에서는 ‘농산물 판매·유통 등 경계사업 활성화’가 5점 만점에 3.93점으로 7개 과제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합장 조합원 직선제 적

용’은 ‘중요하다’는 응답이 38.8%로 ‘중요하지 않다’ 25.8%보다 13.0%p 높았다.

반면 ‘독립적인 농협 감사위원회 신설’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8.5%로 ‘중요하다’ 29.5%보다 9.0%p 높게 나타났다. 농업인들은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보다 농산물 판매·유통 등 실질적인 경제사업 강화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삼석 의원은 “7년째 이어온 조사가 보여주는 현실은 분명하다. 농업의 미래를 비관하는 농민이 절반을 넘어선 현실을 정부와 국회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CPTPP와 농지 전수조사를 비롯 주요 농정 현안도 농업인의 삶과 소득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전남광주특별시 첫인사…91명 근무지 이동

전남→광주 52명·광주→전남 39명…승진점수·거주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조직개편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해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91명이 ‘중전 근무지’를 벗어나 광주·무안·동부청사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무안·동부청사 5급 공무원 642명과 6급 이하 219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지난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승진·전보 인사를 모두 완료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본인 희망을 반영해 광주, 무안, 동부청사 간 근무 인원을 이동했다.

무안·동부청사에서 광주청사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 공무원은 5급 이상 18명, 6급 이하 34명 등 총 52명이다.

반대로 광주에서 무안과 동부로 옮긴 공무원은 5급 이상 26명, 6급 이하 13명 등 39명으로 파악됐다.

조직개편과 인사에 따라 광주청사(1341명)와 무안청사(1143명) 정원은 줄었고 동부청사(394명)는 늘어났다.

현원은 광주청사 1340명(총원율 99.9%), 무안청사 1043명(91.3%), 동

부청사 351명(89.1%)이다.

시는 시·구·군 전임자와 신규 임용자를 중심으로 부족 인원을 충원하고 근무지 이전 공무원에게는 승진 가점과 거주·교통비 지원 등으로 통해 인력을 채워나간다는 복안이다.

시는 ‘중전 근무지’에서 다른 청사로 이동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1.2점, 2년 2.4점, 2년 6개월 이상 최대 3점의 승진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월 60만원의 거주 지원비 또는 출퇴근 교통비 50만원, 이사비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기능 중심으로 이뤄진 조직개편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전문 부서는 각 청사에 배치했다.

본래 무안청사 소관인 공공의료 혁신추진단 중 지역필수의료팀과 공공의료팀, 반려동물정책과의 광역동물보로센터 등은 광주청사에 배치했으며, 국제협력담당관의 농수축산수출1·2팀, 안전정책과 민방위경보2팀, 재난안전상황과 상황관리2팀, 수자원관리과의 수질관리팀은 무안청사에 됐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명태군 여론조사’尹 무죄로 뒤집혀

정치자금 기부 고의 인정 안 돼

정치 브로커 명태군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

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1심 판결과 배치된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번 판결에 상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연간 25조원’ 광주특별시 금고 선정 돌입 5·18 왜곡·편향 심각…“국가보훈부 나서야”

공모 마감…참여 은행·심의위원회 비공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연간 25조원에 달하는 통합 재정을 관리할 차기 금고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7일 전남광주특별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한 금융기관들의 제안서 접수가 마감됐다. 통합특별시는 연간 25조원 규모의 통합 예산과 5조원에 이르는 통합지역 정부지원금 등을 관리할 금고를 2곳 선정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직후 임시 금고 역할을 맡아온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 등이 이번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 결과에 따라 1순위 금융기관은 제1금고를 맡아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지원금 등을 관리하게 된다. 2순위 금융기관은 제2금고로 지정돼 23개 특

별회계와 33개 기금을 담당한다.

통합특별시는 오는 26일 금고지정 심의 위원회를 열어 참여 금융기관의 제안 내용을 심사한 뒤 1·2금고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새 금고의 계약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이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통합특별시는 공모에 참여한 금융기관 명단을 우선 공개하지 않고, 심의위원회 역시 참여 금융기관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금융기관별 제안서를 평가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흥)은 7일 정부위 국정감사에서 “온라인과 공적 영역 전반에서 폭증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편향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당 의원들이 방송과 국회 토론회 등 공적 자리에서 5·18을 폄하하거나 신군부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온라인상의 역사 왜곡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5·18 왜곡 관련 민원은 2023년 16건에서 2026년 8월 기준 894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가 스타벅스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개설한 ‘5·18 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콘텐츠 신고 페이지’의 운영 실태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접수된 총 200건 중 삭제가 이뤄진 것은 단 14건(7%)에 불과했으며, 미삭제가 61%, 관련성 없음·신고 대상 아님 처리가 32%를 차지했다. 특히 보훈부는 커뮤니티 화원가입 필요나 열람 등급 제한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수의 신고를 미삭제로 방치했다.

김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와 민주유공자의 명예를 지켜야 할 보훈부가 기술적 핑계를 대며 손을 놓아선 안된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왜곡에 대해 직접 고발과 수사의뢰 등 보훈부가 무관용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누리호 발사’서 계속

이번 발사는 민간 주도 발사체 제작·운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갖는다. 항우연이 제작을 주관한 1~3차 발사와 달리 4·5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관련 작업을 총괄했다. 5차에서는 기술 준비와 운용에 참여하는 민간 인력도 확대됐다.

전남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발사체 생산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6차 발사부터는 기존 나로우주센터에서 수행하던 단 조립 작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순천에 구축한 단조립장에서 진행한다.

고흥에 집중됐던 발사체 관련 기능이

순천의 제작·조립 시설과 연결되면서 민간 기업의 참여 범위로 넓어지는 것이다.

6차 발사 역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우주 궤도에 올리는 것이 주된 임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6차 발사에서 대부분의 조작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복 발사를 통해 제작부터 정비·운용까지 민간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흐름이다.

우주항공청은 2032년까지 매년 1회 이상 누리호를 발사해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 주도 상업 발사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고객이 요구하는 궤도와 일정에 맞춰 위성을 운송하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로, 순천의 단 조립장과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후속 발사를 뒷받침하게 된다.